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keiokim@kiep.go.kr, 044-414-1017)

김서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seoheekim@kiep.go.kr, 044-414-1287)



차 례

1. 참의원 선거 결과
2. 기시다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3. 평가와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2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2/3를 차지
 - 해당 정당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총 93석을 차지하며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성공
 -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은 465석 중 2/3인 352석을 확보
- ▶ 2022년 6월 7일 일본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결정
 - 2022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① 일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일본경제(제1장) ②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제2장) ③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제3장) ④ 중장기 경제재정운영(4장)으로 구성
 - [성장·분배] △인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스타트업 △GX(녹색전환) △DX(디지털전환)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하는 한편,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확대 등 소득분배정책을 추진
 - [외교 및 안보] 2022년 말까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여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의 안보 정책 및 방위능력에 대한 중장기 관점을 정의한 '방위계획대강'도 개정한다는 방침
 - [사회보장]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
- ▶ [시사점]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아베노믹스를 거의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
 -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되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 '색깔'을 추구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헌법 개정 및 방위비 증액 등 아베 정권의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

1. 참의원 선거 결과

■ 2022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2/3를 차지함.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참의원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5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 보궐 1석)을 새로 선출함.
 -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음.
-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6석을 차지한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경우 목표였던 23석에 미달한 17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125석 중 과반인 63석을 단독으로 획득하였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3석, 일본유신회가 12석, 국민민주당이 5석을 획득
 - 반면 입헌민주당의 경우 17석을 확보하여 총의석수가 선거 전 45석에서 39석으로 감소
 - 이외에도 일본공산당이 4석, 사회민주당이 1석을 확보하여 최악의 경우 정치단체로 활동할 가능성

표 1. 참의원 의석 변동

정당	7. 10 선거 결과	총의석수
자민당	63	119
공명당	13	27
입헌민주당	17	39
일본유신회	12	21
국민민주당	5	10
일본공산당	4	11
레이와 신선조	3	5
사회민주당	1	1
NHK당	1	2
참정당	1	1
무소속	5	12

자료: NHK.

■ 이번 참의원 선거는 기시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으나,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추도선거'로 변질됨.

- 2022년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유세 중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함.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¹⁾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과 방위력 강화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움.

1) 「安倍氏銃撃、投票行動に一定の影響か与野党幹部が言及」(2022. 7. 11), 『毎日新聞』.

-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총의석수 대비 2/3 이상의 의석 필요
 -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이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긍정적인 이른바 ‘개헌 세력’이 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인 352석 확보
 - 해당 정당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총 93석을 차지하며 참의원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성공
 - 개헌에 대한 세부사항 및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두고 개헌 세력간에 의견차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 이어질 전망
- 참의원 선거가 기시다 정권의 중간평가적 성격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도선거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여당 내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기시다 총리의 정책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자민당 내 역학관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임.

-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청화정책연구회(아베파)의 수장이었는데, 청화정책연구회는 전통적인 보수파이자 당내 가장 많은 인원인 93명을 보유한 파벌로, 정부 및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해당 파벌에 소속되어 있음.
 - 현재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성 장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유력한 후보는 없는 상황²⁾
 -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강했던 만큼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민당의 선거공약이었던 헌법 개정 및 방위비 증액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 제기
-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굉지회(宏池会) 소속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무상에 온건파인 하야시 요시마사를 기용하는 등 아베 전 총리의 강경 노선과 다소 다른 방향을 보임.

표 2. 일본 자민당 내 주요 파벌

명칭	통칭	영수	주요 정치인	인원
청화정책연구회 (清和政策研究会)	아베파	아베 신조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등	93인
평성연구회 (平成研究会)	모테기파	모테기 도시미쓰	가토 가쓰노부, 신도 요시타카 등	54인
지공회(志公会)	아소파	아소 다로	고노 다로, 스즈키 슌이치 등	49인
굉지회(宏池会)	기시다파	기시다 후미오	하야시 요시마사, 가미카와 요코 등	44인
지수회(志帥会)	니카이파	니카이 도시히로	다케다 료타, 하야시 모토오 등	42인
근미래정치연구회 (近未来政治研究会)	모리야마파	모리야마 히로시	이시하라 노부아키 등	7인

자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最大実力者」安倍氏死去で自民党はどう変わるか(2022. 7. 9), 『東洋経済』.

2. 기시다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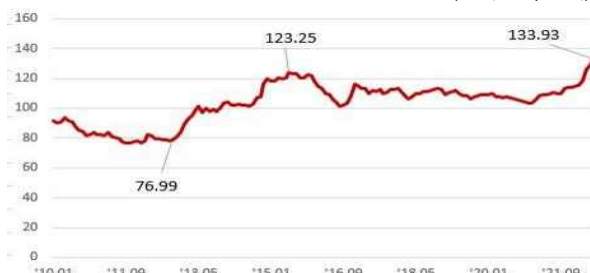
가. 호네부토 방침

■ 2022년 6월 7일 일본정부는 기시다(岸田) 내각 출범 후 첫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이른바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³⁾을 각의결정함.

- ‘호네부토 방침’은 2001년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출범 이후 매년 각의(閣議)에서 의결되는 정책으로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차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2022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① 일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일본경제(제1장) ②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제2장, 기시다 내각의 성장전략) ③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제3장) ④ 중장기 경제재정운영(4장)으로 구성
- 호네부토 방침에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기후변화 문제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표명함.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 취임 이후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 중
 - 최근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50.4%를 기록하는 등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일본은행이 떠맡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⁴⁾
 - 지난 5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였으나 이는 원유 가격 상승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⁵⁾
 - 구로다 총재는 급격한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후임으로 거론되는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일본은행 부총재, 나카소 히로시(中曽宏) 전 부총재 역시 모두 양적완화를 지지하고 있음.⁶⁾

그림 1. 엔/달러 환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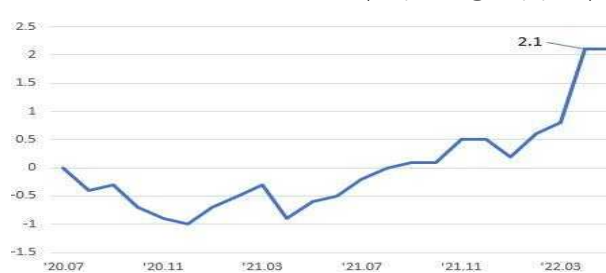
(단위: 엔/달러)



자료: みずほ銀行, 外国為替公示相場ヒストリカルデータ, <https://www.mizuhobank.co.jp/market/historical.html>(검색일: 2022. 7. 15).

그림 2.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総務省・統計局, <https://www.stat.go.jp>(검색일: 2022. 7. 16).

- 3)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용어는 2000년 모리(森喜朗) 내각의 미야자와(宮沢喜一) 재무장관이 “예산은 재무성에 맡기고 내각은 뼈가 굵은(骨太) 논의를 해달라”는 발언에서 유래함. 정식 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새로운 자본주의로: 과제해결을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経済の持続可能な成長の実現)と改革の基本方針2020. 新しい資本主義へ課題解決を成長のエンジンに変え、持続可能な経済を実現」(호네부토 방침 2022, 骨太方針 2022)임.
- 4) 「日銀の国債保有, 6月末時点で50.4%指し値対象銘柄が大幅増」(2022. 7. 4), Reuters.
- 5) 해당 수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값으로(2010년=100), 신선식품을 포함한 CPI 수치는 101.8,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수치는 100.1을 기록.
- 6) 「日銀, 黒田緩和は終わらない真の試練は円安より円高」(2022. 7. 11), 『日本経済新聞』.

나.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정착

1) 5대 중점분야에 대한 민관투자 확대

■ 일본정부는 △ 인재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 스타트업 △ GX(녹색전환) △ DX(디지털 전환)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함.

■ [인재] ‘인재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2024년까지 3년간 4,000억 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인적 투자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생산성 역시 낮은 수준인데, 인적 투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DP 대비 0.1% 수준으로 미국(2.08%), 독일(1.78%)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⁷⁾
- 일본정부는 2024년까지 약 4,000억 엔을, 비정규직까지 포함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능력 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투자하여 현 100만 명 규모의 디지털 인재를 2026년까지 330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임.

■ [과학기술]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및 의료·유전자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대학 펀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을 조성할 것을 강조함.

- 기시다 정부는 ‘과학기술 입국’을 강조하며 DX와 Society 5.0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함.
-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서는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바이오 제조, 재생·세포의료·유전자 치료) 분야를 ‘국익에 직결되는 과학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 연계 과학기술 투자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방안이 포함됨.
- 세계적인 연구대학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 확립, 규제 개혁, 지역 대학간 산학 연계 추진 등이 포함됨.

■ [스타트업] 향후 5년간 스타트업 수를 10배 늘린다는 목표하에 지속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 일본은 미상장 유니콘 기업⁸⁾이 6개에 불과한데, 60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150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중국에 비하면 적은 수준
- 2018년 일본정부는 ‘J-Startup’이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중 약 100여 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전시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혜택 등을 부여해왔으며, 2020년 7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4개 도시를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도시’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기업성장보조금, 정부조달 입찰 우대혜택 등을 지원
- 일본정부는 2022년 말까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기업 수를 10배로 늘리겠다는 방침

7) 「人への投資、世界水準遠く 骨太方針決定 3年で4000億円、成長へ生産性向上急務」(2022. 6. 8), 『日本経済新聞』.

8) 일본의 유니콘 기업은 Preferred Networks(AI 개발), TBM(플라스틱-종이 대체소재 개발), Smart HR(클라우드 기반 인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SmartNews(뉴스 플랫폼앱), Spiber(차세대 소재 개발), HIROTSU바이오사이언스(조기암검진) 등 6개임.

■ [GX]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확보 및 탈탄소 대응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사회·산업 구조 변혁을 목표로 2022년 중에 GX 투자 10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 일본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데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며 150조 엔 규모의 민관협력 투자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 로드맵에는 GX 경제 이행채(가칭, transition bond) 신설, 규제·지원 일체형 투자촉진책, GX 리그의 단계적 발전·활용, 새로운 금융기법 활용,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 구상의 5가지 신규정책 이니셔티브를 포함)
 -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17일 개최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에서 '새로운 자본주의'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산업구조, 국민의 삶 등 전방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밝힘.
 -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17조 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 규모인 5조~6조 엔보다 3배 이상의 투자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20조 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탈탄소사회 이행에 사용될 재원은 GX 경제 이행채(가칭)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
 - * GX 경제 이행채는 유럽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을 참고하여 발행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GX 이행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구체적인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
 - 다만 일본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지연, 에너지 조달 불안정까지 더해져 탈탄소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

■ [DX] 분권형의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¹⁰⁾

- 향후 3년 동안 '디지털 원칙에 입각한 규제 일괄 검토계획'을 통해 규제의 단순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임.
- 마이넘버 카드 보급, 의료·간병 등과 관련된 데이터·플랫폼 정비
 - 2022년 5월 기준 전국의 마이넘버 발급률은 44%로 미야자키현(57.1%), 효고현(49.0%), 나라현(48.0%) 순으로 높은 발급률을 기록¹¹⁾
 - 일본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홍보를 위해 2021년 말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등록할 경우 2만 엔가량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시스템 설치 비용을 카드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일본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에 건강보험증 기능을 포함한 '마이너 보험증' 시스템 도입을 2023년 4월까지 의무화할 예정
 - 이외에도 예방접종기록시스템(G-MIS) 및 영수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상 확보, 이용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시각화를 철저히 할 예정

9) GX 리그는 탈탄소 대응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구성된 리그로, 가입 기업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임. 440개사(일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이상 차지) 참가.

10) 2021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63개국 중 28위를 차지함(한국 12위, 중국 15위).

11) 総務省(2022. 5),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市区町村別交付枚数等について」.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 기시다 내각은 자산소득배증 플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함.

- 일본정부는 가처분 소득 증가 및 가계 소비 증진을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계획을 발표함.
- 일본정부는 2025년까지 1시간 기준 최저임금 평균액을 1,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임.
 -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30엔으로, 도쿄 및 가나가와 현이 각각 1,041엔, 1,040엔으로 1,000엔을 넘는 반면 고치현과 오키나와현은 가장 낮은 820엔을 기록¹²⁾
 - 2022년 6월 28일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도 최저임금 개정 논의를 시작함.
 - 중소기업은 이러한 임금 인상이 경영부담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국민의 자산소득을 2배로 증대시키기 위한 ‘자산소득배증 플랜’을 수립함.
 - ‘자산소득배증 플랜’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일본 개인의 금융자산을 투자로 유도하여 국민의 자산소득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정책
 - 2021년 3월 기준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약 2,000조 엔 중 54%가 현금 및 예금 형태이며, 해당 자금의 2/3 이상을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¹³⁾
 - 다만 기업의 수익성이 강화되고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일본 주식의 매력도 감소할 것이며, 개인 금융자산은 국내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채권 및 주식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¹⁴⁾
 - 일본정부는 자산소득배증 플랜에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¹⁵⁾ iDeCo¹⁶⁾ 제도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

다. 국가안보 및 경제안전보장 강화

■ 외교 및 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식료품 등 분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연계 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외교 및 안보]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호주, 인도 등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연내에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방위비 증액 등 5년 내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일본정부는 호네부토 방침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NATO 가입국이 국방예산을 GDP의 2% 이상으로 합의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국방 예산의 ‘상당한 수준’ 증액을 시사

12) 「最低賃金1,000円以上25年度にも政府方針、消費活性化図る」(2022. 6. 2), 『讀賣新聞』.

13) 熊野 英生(2021), 「危ういコロナ禍で膨張する個人マネー:家計金融資産1,946兆円の構造」, 第一生命経済研究所.

14) 「岸田首相 資産所得倍増プラン、2,000兆円活用で円安進行リスクも」(2022. 6. 10), 『日経ビジネス』.

15) 소액투자비과세제도는 연간 120만 엔 한도의 자산 투자금액에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8년 40만 엔 한도의 투자신탁금액에 투자 시 2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는 적립식 NISA 제도가 추가되었음.

16)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정식 명칭은 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한국의 IRP와 유사함.

-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증액'을 이번 참의원 선거공약에 포함하였고 기존 '적 기지 공격능력'의 명칭을 '반격능력'으로 변경해 '원거리에서 적 기지 또는 군사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 및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움.
- 일본정부는 2022년 말까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여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의 안보정책 및 방위능력에 대한 중장기 관점을 정의한 방위계획대강도 개정할 예정¹⁷⁾
- 이외에도 대만에 대한 미·일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등, 처음으로 호네부토 방침에 양안문제를 언급
- [경제안보] 경제활동과 양립가능한 안보정책 및 선행적인 공급망·민관기술협력 추진 등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기사다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안전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법적 근거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수출 통제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 특허 출원 제한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일본정부는 호네부토 방침에서 자금과 같은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지원 및 필요한 보조금 등의 조치를 수립할 것이라 밝힘.
 - 내각부에 경제안보진흥실(가칭)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간 경제안보 문제를 조정할 예정임.
 - 이외에도 2023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정보 접근 자격을 일부 민간인으로 한정하는 비밀취급인가(SC) 제도를 논의할 예정임.¹⁸⁾

라. 중장기 경제재정운영

1) 재정건전화 계획

-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서는 지난해까지 명시하였던 '2025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대신 '재정 통합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만 삽입됨.
-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 대신 경기부양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뜻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이를 두고 자민당 내 재정건전화를 주장하는 '재정건전화추진본부'와 적극적 재정지출을 옹호하는 '재정정책검토본부' 간 의견차가 있었으며, 아베노믹스하에서도 재정부양책이 불충분하여 디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는 재정정책검토본부의 의견이 좀더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측¹⁹⁾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 132.6%, 영국 95.3%인 반면 일본의 경우 263.1%에 달하며, 기초재정수지 적자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일본은행이 50.4%에 달하는 높은 국채 보유비율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는 조기에 달성되기 어려울 전망

17) 「防衛力強化、秋以降に議論本格化 焦点となる規模と財源」(2022. 7. 10), 『毎日新聞』.

18) 「機密情報取り扱い資格を制度化へ 経済安保、改正案を来年提出」(2022. 6. 19), 『産経新聞』.

19) 「財政積極派に配慮で骨太後退 健全化目標「25年」削除」(2022. 6. 7), 『日本経済新聞』.

- 일본정부가 '실질GDP성장률 2%, 명목GDP성장률 3%'를 가정한 '성장실현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정부의 재정흑자 목표는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 추산 및 성장실현 시나리오가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라고 지적함.²⁰⁾

2)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 사회보장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부담은 청·장년 세대에게, 보험의 혜택은 고령세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됨.
 - 2021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하였고, 204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93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는 모든 세대가 균형잡힌 부담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서로를 지원하는 등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이라는 목표를 '호네부토 방침'에 명시함.
 - 일본은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금 수령 나이의 상한을 75세로 올린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일정 이상 수입이 있는 60대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현직노령연금(在職老齢年金) 제도를 개정한 바 있음.
- 일본정부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함.
 - 일본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비정규직,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근로자보험(勤労者皆保険)' 제도를 심의 중임.

3. 평가와 시사점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기시다 내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출범 당시부터 아베노믹스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음.
 -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하는 자민당 내 핑지회는 당내 4번째 파벌로, 당내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도 헌법 개정 및 방위비 항목 기간 명시 등 당내 강경 보수파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²¹⁾

20) 内閣府(2021. 7. 21), 「中長期の経済概観に関する試算」 및 星野卓也(2022), 「骨太方針 2022 のポイント」, *Economic Trends*, 第一生命経済研究所.

21) 「安倍氏に配慮 政府が骨太の方針原案修正、防衛力強化5年以内にと明記」(2022. 6. 3), 『讀賣新聞』.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헌법 개정 및 방위비 증액 등 아베 정권의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22년 ‘호네부토 방침’은 양적완화 기조, 확장적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을 특징으로 하며,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음.

- 기시다 내각은 출범 이후 ①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②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③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을 물려받아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였다고 평가됨.
 - 기시다 내각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5개 집중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정책 등은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과 유사
 -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평균임금 수준 정체, 재정수지 적자 규모 급등 등의 한계를 노정
- 이에 기시다 내각은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 ‘색깔’을 추구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서는 재정건전화 목표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임.

- 기시다 내각이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베노믹스의 뒤를 이은 재정확대 의지의 발로임.
- 2021년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러한 성장률이 지속되고 일본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경우 재정건전화는 요원할 전망이다. **KIEP**